

부산항, 전면파업 15일이면 올스톱

트레일러 2000대 참여하면 항만기능 상실 ... 군 트레일러 투입 검토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12월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면서 부산항에 일부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5위 컨테이너 처리항만인 부산항은 화물연대의 전면파업(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5일간 계속되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연대 소속 운전사는 물론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주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상황을 말한다.

부산 항만업계는 트레일러 자동차 2000여대(화물연대가입 412대 포함)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면 사실상 전면파업이라고 규정했을 때 부산항은 집단 운송거부 15일이면 사실상 마비돼 항만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파업이 장기화되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들이 제때 부두를 빠져나가지 못해 부두 장치장이나 부두 밖 장치장(ODCY)에 컨테이너가 쌓이게 되고 15일간 지속되면 부산항 내부 장치장이나 ODCY에 더이상 물량 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항만기능의 완전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관건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지 않은 트레일러 차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로 요약되고 있다.

부산해양청은 대규모 집단 운송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부두 운영회사에 부두의 장치화물을 조기 반출해 부두 내부 장치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는 한편 해운대구 센텀시티 등 23만평의 임시장치장을 확보했다.

또 군, 차주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군 트레일러 128대, 차주협회 자동차 500대 등 628대의 트레일러를 확보해 운송거부 돌입 시 곧바로 투입키로 했다.

운송거부 사태가 길어지면 북항에 있는 화물을 신항으로 옮기거나 철도운송을 늘리고 용선 투입과 외국적 선사에 연안운송을 전면 허용해 육상수송 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이 15일 이상 지속되면 특별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부산해양청은 파악하고 있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소속 트레일러의 비중은 20%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 트레일러 차주들이 대규모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산항 마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물류 전문가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돼 부산항이 마비된다면 2006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200만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항만 마비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1>